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236 |
|----------|-------|

발의연월일 : 2022. 11. 14.

발 의 자 : 이성만 · 김교홍 · 김홍걸
송옥주 · 위성곤 · 윤준병
이형석 · 정일영 · 한정애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상가 건축물과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에, 재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념으로 추가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 수립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로 추가함(안 제2조 및 제4조제4항 신설).

나. 재난 발생의 우려 또는 재난이 발생한 때에 대피명령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40조제1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지원하고, 재난 피해 원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라.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외에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이 되는 ‘주 생계수단 피해’에 상업을 추가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포함함(안 제66조제3항).

마.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함(안 제66조의2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것이”를 “것은 물론, 그 피해에 대해 일상으로 회복 가능한 온전한 보상을 하는 것이”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해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있다”를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생계안정”을 “일상회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업”을 “상업·농업”으

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 및 그에 따른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

7의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제66조의2제1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복구비 산정 중인 피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u>것이</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 ----- ----- <u>것은 물론, 그 피해에 대해 일상으로 회복 가능한 온전한 보상을 하는 것이</u> ----- ----- ----- ----- ----- ----- ----- ----- -----.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설></u>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
|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 | 제40조(대피명령) ① ----- |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

-----명해야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신설>

3.4. (생략)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생략)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신설>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

2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 및 그에 따른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

3.4. (현행과 같음)

5. -----일상회복-----

6. (현행과 같음)

7. -----상업·농업-----

7의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 | |
|--|---|
| | <u>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u> |
| 8.9. (생략) | 8.9. (현행과 같음) |
| ④ ~ ⑦ (생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u>지급할 수 있다.</u> | ① ----- ----- ----- ----- ----- ----- ----- ----- ----- ----- ----- <u>지급하여야 한다.</u>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